

지선 1191명 출사표 경쟁률 '1.77 대 1'... 무투표 당선 76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15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내 372개 선거구에 모두 1191명이 등록을 마쳤다.

선거별 등록 현황은 도지사 5명, 도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75명, 광역의원 293명, 기초의원 650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6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104명 등이다.

평균 경쟁률은 1.7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별로는 경기도지사 5대 1, 기초단체장 2.4대 1, 광역의원 2대 1, 기초의원 1.6대 1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3대 1, 기초의원 1.8대 1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조웅천 개혁신당 후보, 홍성규 진보당 후보, 김현욱 국민연합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임태희 후보, 안민석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도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시 선거구에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

경기도지사 경쟁률 5대 1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국힘 공천 무산에 민주당 후보 독주
기초의원 65명 '무투표 당선' 쏟아져

혁신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안산시장 선거구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 문인수 개혁신당 후보가, 하남시장 선거구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이웅 국민의힘,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도내 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65명 등 총 76명(비례대표 제외)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현 시흥시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천천시2 ▲안산시2 ▲안산시5 ▲화성시6 ▲화성시8 ▲

시흥시1 ▲시흥시3 ▲군포시4 ▲파주시 ▲용인시3선거구에서 등록 후보 수와 정수가 일치하면서 무투표 당선 이뤘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수원나 ▲수원라 ▲수원카 ▲수원차 ▲성남나 ▲성남나카 ▲안양나 ▲광명라 ▲평택다 ▲양주카 ▲안산라 ▲안산바 ▲고양자 ▲고양타 ▲고양파 ▲오산나 ▲화성사 ▲군포라 ▲하남가 ▲하남라 ▲용인나 ▲용인라 ▲용인마 ▲광주다 ▲광주라 등 29개 선거구에서 총 65명의 무투표 당선이 쏟아졌다.

특히 성남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체 12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며, 도내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벽보 부착과 유세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 관련기사 234면 정진우 기자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소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가 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는 정해진 길, 포비아 극복해야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급속히 확산됐다.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은 여전하다. 지하주차장 화재, 주차 중 발화 등 사례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출입 제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전문가들은 충전기 문제보다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열 특성과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화재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배터리 내부 결함이나 분리막 손상, 탭드라이트 형성, 셀 불량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17일 국내의 연구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최초 발화점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은 고전압 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를 위해 설계됐지만, 특정 조건에서 열폭주가 발생하면 주변 셀로 급속히 퍼지는 연쇄 반응으로 급격히 온도가 상승(1000℃ 이상)하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열폭주는 과충전, 내부 단락, 제조 결함, 물리적 충격,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상 등 복합적 요인으로 촉발되지만, 핵심은 배터리 셀 내부의 화학적·물리적 불안정성이다.

충전 중 화재는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15%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는 사전 배터리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집중기획 전기차 보급의 역설 ③

전기차 화재를 내연차보다 낮지만
잇단 화재로 '대형 사고' 낙인
지하주차장 충전 시설 갈등 촉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화재 주원인
"배터리 안전성 향상 초점 맞춰야"

충전기는 배터리의 상태를 자극하거나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 역할할 뿐, 정상적인 충전기와 차량에서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에 의해 차단돼 직접적인 발화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의 주원인은 배터리 때문이며 충전기가 원인이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충전기의 과도한 전력 공급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상당수는 배터리 충전이 끝나고 대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에 이상이 있거나 완충된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

스템인 BMS에서 차량 전체 상태를 살핀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력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는 충전 중이 아니었고, 주차 중이던 차량에서 발화했다.

울산 전기차 충돌 화재는 주차·주행 중 발화 사례에서도 배터리 팩의 열폭주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을 자체는 내연기관 차보다 낮은 편이지만, 한번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크다는 점이 포비아를 키운 셈이다.

일각에서는 충전기나 충전 인프라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부분적이다.

정상 설치된 충전기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과 연동돼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화재 위험을 과도하게 부풀려 포비아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의 근본적 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원인임을 직시하고 과학적 대책을 세울 때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지며, 전기차 시대의 안전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화철 기자

권력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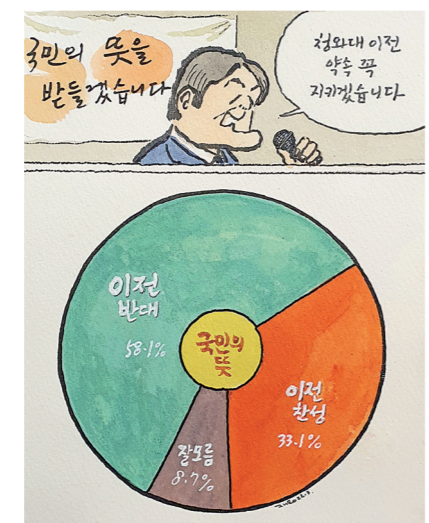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청와대 이전 논란'을 들고 왔다.

본지 2022년 3월 23일자 1면에 실린 민평 상단에는 마이크를 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래에는 당시 청와대 이전 여론조사 결과를 형상화한 원형 그래프가 배치됐다. 그래프에는 '이전 반대'가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전 찬성'은 33.1%, '잘 모름'은 8.7%로 표시돼 있다.

박재동은 말과 현실의 괴리를 한 화면 안에 압축했다.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와 달리 실제 여론은 이전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정책은 이와 반대로 추진됐다는 점을 표현했다. 국민의 뜻이라는 문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

박재동의 붓으로 그린 총선살인 9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안보 공백 우려, 졸속 추진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박재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정작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버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백악관처럼 소박한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논리에 흘러든 이전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의 품'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미지 그쳤다"며 "오히려 경찰 병력 집중과 경호 문제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재동은 '선택적 민심' 읽기를 꼬집으며 권력이 말하는 '국민'이 실제 시민 다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되묻는다. 서해주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 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 시 | 5월 29일(금)~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정선거
지방의회 의원	시·도의원선거(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시·도의원선거(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비례대표)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세종·제주(4정)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일정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